아이들에게 조롱당하는 어른들 세상

교육의창



교육평론가

"우리가 뽑지는 않았지만, 우리가 뽑 아내겠습니다."

거리로 쏟아져 나와 당찬 목소리를 외 친 청소년들의 주장을 접하면서 깜짝 놀 랐습니다. 12·3 불법 계엄을 저지른 대 통령 탄핵을 표결하는 본회의장에서 도 망치는 국회의원들의 뒷모습과 클로즈 업되었기 때문입니다. 부끄럽습니다. 이 시대 어른인 것이 부끄럽습니다.

학생들이 정치인들과 공직자들에게 외쳤습니다.

"우리는 왜 군인들이 우리 국민에게 총을 드는 장면을 봐야 합니까?"

"지금 국민의 대표자들에게 총을 겨누 고도 나의 권한을 활용했다는 내란죄 피 의자를 지키는 게 옳습니까! 아니면 자 신의 의원자리를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합 니까? 이런 사태를 일으킨 대통령을 배 신하지 말자고 뜻을 모을 게 아니라 진짜 배신하지 말아야 할 대상은 바로 국민들 아닙니까!"

교과서로만 배웠을 계엄에 대한 학생 들의 현실 인식은 예리했습니다. 그들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계엄은 무차별 폭행의 전시체제로 사회를 둔갑시킨다 는 것을. 계엄은 가장 포악한 국가폭력 을 자행한다는 것을. 44년 전, 80년 5월 광주에서 벌어진 국가폭력이 인권과 평 화, 정의와 공정을 무너뜨린 폭력이었음 을 정확하게 간파하고 있습니다.

쏟아지는 학생들의 질문은 어른들을 더 부끄럽고 초라하게 만들었습니다. 자

신들과 다른 어른들이 미래를 망가뜨리 고 있다는 사실을 서슴없이 열거했습니 다. "국민이 뽑은 대통령에게 주권을 위 임했을 뿐이지 거꾸로 국민을 죽이는 내 란수괴를 뽑지 않았다."고. 내란을 편드 는 국회의원들은 국회 문을 부수고 들어 가 "싹 잡아들여"라는 내란수괴와 한통 속임을.

어른들이 어처구니없는 왕정국가를 만들고 민주국가라고 거짓 교육을 늘어 놓다 한순간 들키고 만 셈입니다. 우리 헌법에는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 다.'고 명시하고 있음에도 어른들은 천 연덕스럽게 거짓말로 둘러대 각색하였 습니다. 헌법을 휴지 조각 만든 어른들 은 온통 거짓말쟁이가 된 것입니다.

어른이라고 다 어른이 아닙니다. 그대 들의 지각없는 친구들보다 더 나쁘게 자 란 어른들이 넘치는 게 사실입니다. 남 과 갈등이 생겨 상대를 이길 수 없으면 욕설을 퍼붓는 모습이 이들에게 겹쳐 보 입니다. 그것도 모자라면 주먹질하거나 물건을 집어 던지는 막가파처럼 특수부 대를 동원했습니다. 대통령이 딱 그 수 준입니다. 정치인들과 대화가 안 된다고 총을 든 특수부대 군인들을 앞세웠다는 그대들의 지적은 날카롭습니다.

망상장애와 가상현실에 빠진 어른들 에게 그대들의 예리한 문제제기가 있어 서 천만다행입니다. '국민을 향해 총칼 을 겨눴다는 점이 가장 큰 잘못'이라는 지적 앞에 민주주의의 개념완성을 보아 안심입니다. 시위가 응원봉이 되고 시위 가 민주주의의 콘서트가 되는 성숙미까 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대들이야말로 부끄러운 어른들에게 진짜 어른이 된 민 주시민입니다.

그대들의 신박함과 달리 구태의연한

채 대화와 타협을 할줄 모르고 억지 주장 만 늘어놓은 어른들을 향한 날카로운 하 이킥입니다. 대화와 설득의 정치는 사라 지고 조작과 겁박만 난무하는 정치 현실 이니 어른들의 쫄보문화가 더 졸렬해지 지 않습니까.

입만 열면 거짓말을 하고 대화할 줄 모 른다는 것이 이번 사태 앞에 어른으로서 가장 부끄러운 점입니다. "국회가 적입 니까!"네 편과 내 편을 구분할 줄 모르는 것을 넘어 대화 요령도 모른 채 싸움 제 일 잘하는 특임부대를 동원합니다. 그리 고 민의의 전당인 국회를 마비시켜 자기 주장을 정당화하면 됩니까. 이런 광경을 목격하면서 그대들이 싸우더라도 말할 수 없게 됐습니다. 이제 그대들도 상대 와 말이 안 통하면 무기를 들고 싸움질하 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대들의 기발한 패러디가 미래의 희 망입니다. "나는 사랑하는 연인 앞에 계 엄까지 해봤어."라는 부끄러운 패러디가 아니라 "역사에 부끄럽지 않은 어른이 되겠다."는 당찬 목소리 때문입니다. 계 엄령은 소꼽장난이 아닙니다. 그런데 잇 속을 위해 소꼽장난이라고 생각하는 어 른들이 많습니다.

노벨상의 작가 한강의 이야기가 귓전 을 울립니다. "인간의 잔혹성과 존엄함 이 극한의 형태로 동시에 존재했던 시공 간을 광주라고 부를 때, 광주는 더 이상 한 도시를 가리키는 고유명사가 아니라 보통명사"입니다. 그리고 한 마디 덧붙 였습니다. "시간과 공간을 건너 계속해 서 우리에게 되돌아오는 현재형"이라고 일갈했습니다. 세계인의 가슴에 보통명 사로 남은 계엄에 맞섰던 광주, 이제 광 주정신은 정의로운 피를 이어주고, 민주 주의를 지키는 수호신으로 거듭나서 다 행입니다.



₩ **사**진으로 보는 세상

14일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에 서 한 무료 급식단체가 주최한 크리스 마스 사전 축하 행사가 열려 산타 복장 을 한 남성이 빈민가 아이들에게 선물 을 나눠주고 있다. AP/뉴시스

♠ 서석대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2·3 내란사태 이후 진상 규명에 앞장서며 종횡무진 활약하고 있다.

김 의원은 군대 내에서 '별 중의 별'로 불리는, 별이 네 개인 대장(大將) 출신이다. 1962년생인 김 의원은 육군사 관학교 40기로 2017년 8월 육군 대장에 올랐다. 2019년 4 월 전역 전까지 제30사단장, 육군미사일사령관, 제3군단 장, 한미연합군사령부 부사령관 등 중요 직책을 역임했 다.

김 의원은 초선 시절부터 국회 국방위 원회에 붙박이로 배치될 만큼 국방・안보

분야 전문가로 통한다. 김 의원의 풍부한 군 생활 경험은 내란사태 이후 빛을 발했다. 김 의원은 지난 6일 자신의 유 튜브 채널 촬영팀과 함께 사전 예고 없이 경기 이천에 있는 특전사령부를 찾아가 곽종근 특전사령관 면담을 요청했 다. 이번 계엄군 핵심이었던 곽 사령관은 대장 출신 김 의 원의 기세에 눌렸는지 정중히 예우했고 당시 계엄군의 국 회의사당 진입 배경 등을 비교적 솔직히 털어놨다. 인터뷰 는 '내란계엄 핵심 특전사령관, 양심고백' 이라는 제목으로 생중계됐고, 이는 다른 군 지휘관들의 오판과 경거망동을 막는 결정적 역할을 했다.



김 의원이 지난 10일 국회 국방위원회 현안질의에서 계 엄에 관여한 군장성급 인사들을 강하게 질책했다. 김 의원 은 "군단급 이상 전 부대가 여기(계엄)에 가담이 됐는데 이걸 어떻게 할 거에요, 그렇게 경고했는데 뭐 했습니까, 진짜로 나라가 왜 이 모양이에요"라며 큰 소리로 분통을 터 트렸다. 이날 국방위에는 국방부와 합참 주요 당국자, 작 전부대 지휘관 등 '별'을 단 고위 장성이 대거 출석했지만,

_ 불법 계엄에 가담해 헌법과 법률을 위반 대장 출신 의원의 분노 하고 국가체제의 근간을 흔든 데 대한 사 과는 없었다.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14일 국회 본회의 에서 가결됐다. 탄핵은 끝이 아닌 시작이다. 이제 헌법재 판소의 판단과 사법기관의 수사 및 처벌 등 긴 여정이 기다 리고 있다. 불법 계엄에 가담한 군인들에 대한 사법적 책임 추궁도 불가피하다. 군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용서 를 구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군의 정치적 중립성을 다시 강조하는 기회이자, 과거의 오류를 반복하지 않겠다는 의 지를 국민에게 밝히는 것이기 때문이다. 누구보다 군을 사 랑했던, '대장' 출신의 걱정을 덜어주는 길은 계엄에 가담 한 군 후배들의 진솔한 사죄와 반성뿐이다. 박성원편집국장

社 說

탄핵정국, 지역현안 차질 이어져선 안돼

혼돈에도 지역·경제 순환돼야

'12·3 계엄 사태'와 탄핵으로 광주· 전남지역 현안들이 차질을 빚을 것이 라는 우려가 나온다. 미증유의 혼돈에 빠진 대한민국에서 가장 필요한 것은 국정 혼란과 탄핵정국이라는 불확실 성을 최소한으로 줄이고 정책과 투자 를 연속성 있게 진행해 국정을 하루 빨리 제자리로 되돌리는 것이다. 정치 권과 정부, 자치단체 모두가 꼼꼼하고 치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할 때다.

당장 광주의 경우 윤 대통령을 비롯 해 여·야가 모두 약속한 5·18 정신 헌 법수록이 탄핵으로 인해 논의조차 안 될 것으로 보인다. 광주민간・군공항 통합이전도 정부측 참여 주체가 선정 되지 않으면서 잠정 연기됐다. 광주와 대구를 연결하는 달빛고속철도 사업 도 정부와 논의 단계에서 멈춰선 상황 이다. 광주의 미래 신성장 동력인 인공 지능 2단계 사업과 미래모빌리티 선도 도시 구축 사업은 예산조차 확보하지 못했다. 미래차국가산단으로 지정된 '빛그린산단'과 서남권 원자력의학원 설립, 5·18국제자유민주연구원 설립

등도 제대로 추진될 가능성은 낮다.

전남 또한 국립 의과대학 신설을 비 롯해 전라선 고속화와 수산식품 수출 단지 등이 윤 대통령의 공언으로 기대 를 모았지만 탄핵안 가결로 불확실성 이 커진 상황이다. 특히, 국립 의대 신 설의 경우 목포대와 순천대가 국립대 간 통합에 전격 합의했지만 탄핵 시국 과 맞물려 실현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친환경 재생에너지 산업벨트와 무안국제공항 관문공항 육성 등 대통 령선거 당시 윤 대통령이 내세운 전남 대표 공약들도 일부 성과가 도출됐을 뿐, 상당수는 본궤도에 오르지도 못한 실정이다.

지난 11일 호남지방통계청이 광주• 전남지역 자영업자가 크게 감소하고 실업률은 상승했다는 통계를 내놨다. 정치권의 불확실성이 내수를 부진에 빠뜨리고 실업률을 높였다는 의미다. 계엄과 탄핵으로 나라가 혼란스러워 도 지역과 경제는 순환돼야 한다. 윤 대통령이 약속했던 정책들도 모두 국 토균형발전과 지역 소멸 위기를 극복 하기 위한 꼭 필요한 방안들이다. 탄 핵은 불행이지만 지금은 모두가 힘을 모아 위기를 기회로 만들 때다.

지역업체 참여 절실한 복합쇼핑몰 건립

지역 건설경기 살릴 절호 기회

대형 유통업계의 광주 복합 쇼핑몰 신축이 잇따른 가운데 광주지역 건설 업계의 참여가 이뤄질지 관심이 모아 진다. 우선 현대백화점 그룹이 건축 인허가 절차를 진행 중인 '더 현대 광 주' 복합 쇼핑몰은 지역 건설업계 참 여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더 현대 광주'는 광주 북구 임동 옛 전남・일신방직 부지 '3만 2372.2㎡ 규 모에 특급호텔과 주상복합 시설을 포 함해 신축된다. 건설비는 총사업비 1 조2000억원 중 부지 매입비 2600여 억원을 제외하면 7000억원대에서 9000억원대로 추정된다.

거 타 지역 백화점 신축공사 사례를 업계가 자금난을 겪고 있고, 부도도 언급하며 "지역 업체가 참여할 수 있 을 것"이라고 밝혔다. 실제 현대는 지 아니라 특급호텔과 주상복합시설을 난 2010년 청주 현대백화점 신축공사 를 현대자동차 계열 건설사인 현대엠 코와 지역 건설사 공동도급 방식으로 추진해 지역 건설 경기를 부양시킨 바 있다.

신세계그룹과 롯데쇼핑 역시 복합 으로 기대가 모아진다.

쇼핑몰 신축 또는 리모델링에 나서고 있어 지역 건설업계의 참여 필요성이 제기된다. 광주신세계는 유스퀘어(광 주종합버스터미널)를복합쇼핑몰'광 주신세계 아트 앤 컬처파크' (가칭) 건 립에 나선다. 설립 안에는 9층 백화점 본관과 7층 신관, 47층 업무시설, 43 층 숙박시설(특급호텔), 47층 주거복 합 시설 3동 등이 제시됐다. 신세계측 은 오는 2037년까지 총사업비 4조 4063억원을 산정했다. 롯데쇼핑 역시 내년 상반기께 '롯데아울렛 광주수완 점'을 복합쇼핑몰로 전환하는 공사를 시작할 예정이다. 연면적 12만4275 ㎡, 지하 1층, 지상 8층 규모로 공사가 이뤄진다.

현재 광주 건설업계는 부동산 경기 특히 현대백화점 고위 관계자는 과 침체로 수주난을 겪고 있다. 상당수 잇따르고 있다. 이런 시국에 쇼핑몰뿐 포함한 대규모 복합 쇼핑몰 공사는 지 역 건설경기를 살릴 절호의 기회다. 적게는 수천억원에서 수조원에 달하 는 대규모 공사인 만큼 수주 난 해소 뿐 아니라 경기 회복에 단비가 될 것

全南日報	사장·발행·편집인	이 재 욱	논설실장	이용환	편집국장 박성원	
민주주의 구현 진실보도 실천 지역개발 선도 www.jnilbo.com m.jnilbo.com	대표전화 기사제보	(062)52 (062)51	7-0015 0-0331	경영지원팀 광고영업팀	(062)510-0421 (062)519-0710	
	편집부 취재1부 취재2부 정치부	(062)51	0-0412 0-0380 0-0394 0-0340	문화체육부 온라인뉴스부 사진부	(062)510-0351 (062)510-0461 (062)510-0391	
	구독료 월 1만5천· 1부 800·		1988년 4월25일 등록번호 광주 가-2호 (일간) 우편번호 61474 광주광역시 동구 제봉로 137			

구독신청 (062)510-0471 광고문의 (062)512-0100 FAX (062)510-0436 서울지사 (02)725-8890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합니다

☑ 독자 의견을 환영합니다 (e-메일) webmaster@jnilbo.com